INSS
전략보고
July 2021. No.126

www.inss.re.kr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 추진 동향과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시사점

한승완 책임연구위원
hanphil@inss.re.kr

Ⅰ. 문제 제기

Ⅱ.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 추진 동향

Ⅲ. 이해 당사국의 대응과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전망

Ⅳ.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문 초록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쇠퇴와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부흥'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중산층을 복구하여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사회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우선 아시아의 동맹들과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외교, G7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이니셔티브, EU와 합의한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획 등을 살펴본다. 이어 중국과 EU 및 유럽 국가의 입장을 분석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실행 방향을 전망한다. 이 글은 EU와 주요 유럽 국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우리의 이해관계와 수렴점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가치외교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체제대결이나 '신냉전'이 아니라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위한 '체제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외교전략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자산을 '민주주의 성공 경험'에서 찾고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지원을 제안한다.

핵심어: '민주주의 가치외교', '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권위주의, 체제경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 추진 동향

1. '민주주의 가치외교' 개념과 추진 배경
   가. '민주주의 가치외교' 개념의 잠정적 규정
   나.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추진 배경
2. 민주주의 가치외교 동향
   가.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와 민주주의 가치외교
   나. G7 정상회의와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이니셔티브 추진
   다. 미·EU 정상회의와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설립: 가치동맹과 기술동맹의 결합
   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추진과 전망
      1)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추진 계획과 논란
      2) 추진 전망

Ⅲ. 이해 당사국의 대응과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전망

1. 이해 당사국의 대응과 입장
   가. 중국의 체제경쟁 담론과 대응
   나. EU 및 유럽 국가의 입장
2.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전망

Ⅳ.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시사점

1.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체제경쟁에서 한국의 스탠스 확립
2.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조응하는 외교전략의 마련
3.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원

Ⅰ. 문제 제기

• 바이든 미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국내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바이든의 국내외 정책의 근간이 '민주주의 수호와 부흥'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내외의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의 쇠퇴와 위기였기 때문이다.

• 국내적으로는 인종 갈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기존의 정당 체제와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확산,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포퓰리즘 공세와 이에 대한 상당한 지지 등이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들이다. 해외에서는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즘 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권하여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야심 찬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은 물론 유럽에까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세적으로 펼치는 한편, 서유럽 국가의 핵심 기술기업을 인수, 합병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대규모 공세와 함께 인권, 민주주의 가치,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무역규범을 우회하고, 점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해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중국의 대안적 국제질서를 선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 이러한 대내외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수호와 부흥'이라는 단일한 전략적 목표하에 국내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외교전략에서는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대해 공동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합시켜 대중 공동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중국의 권위주의 거버넌스 대 서구의 민주주의 거버넌스'라는 체제 대결 구도이다. 현재 민주주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국의 부상에 대해 트럼프 전임 미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통해 대응하고자 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동맹과 연대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다자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각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무역·경제

관계에 따라 객관적 국가이익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함께 묶어주는 틀이 '민주주의의 수호와 부흥'이라는 가치일 것이다.

-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가치외교'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중심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추진에 관한 연구,[1]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전망에 관한 연구,[2] G7의 D10으로 확대에 관한 연구[3] 등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외교'라는 주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 전반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그것의 실행 전망과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 추진 동향

1. '민주주의 가치외교' 개념과 추진 배경

가. '민주주의 가치외교' 개념의 잠정적 규정

- '가치외교'라는 개념이 하나의 학술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경우 어떤 특정 외교행위에 대해 '가치 중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지향적' 등과 같이 서술형으로 사용되거나 가치 대신에 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가치외교'의 정의는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자 하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가치외교'를 규정하기 위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에 따르면 '가치외교'는

1) 허석재, "미국 민주주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이슈와 논점 제1795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1월 25일).
2) 강선주,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질서의 지속가능성: 국내정치 필요조건과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에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20-18,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3) Ash Jane/Matthew Kroenig, "From the G7 to a D-10: Strengthening Democratic Coopertation for Today's Challenges", Atlantic Council, (2021).

"특정 가치를 외교행위에 반영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대변(advocate)하고 증진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외교"라고 정의된다.[4)]

- 이 정의에서 '특정 가치'에 '민주주의'를 대입하면 '민주주의 가치외교'가 규정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가치외교'는 '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외교행위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에 이를 대변 증진·실천하고자 하는 외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

-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의 대강을 제시하고 있는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민주주의 가치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의에 준하는 규정이 제시되고 있다.[5)]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우선순위는 일차적으로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과 기회를 확장'하는 데 있다. 동시에 우선순위는 '미국 생활 방식의 중심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옹호'하는 것에 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모든 미국인의 이상과 가치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외적으로 '자유 사회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바로 이 대외적 우선순위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라 볼 수 있다.

- 그런데 국가안보의 두 우선순위, 즉 '미국인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이라는 국익 추구와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과 수호'라는 가치 추구는 우선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 '잠정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 가치 추구에는 동시에 이익 추구가 병행하여 함께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두 가지 외교전략은 서로 교차할 수 있는데, 가령 국가 이익 추구의 외교행위에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이익 추구의 외교 행위가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역으로 민주주의 가치외교가 이익 추구 전략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4) 김태환,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와 정치』 제6권 1호 (2019). p. 9.
5)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p. 9.

나.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추진 배경

•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재 그의 외교안보 관련 주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블링컨 국무장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캠벨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과 함께 이미 후보 시절부터 미국 대외전략의 중심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잡고 있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위협이라는 인식은 사실 트럼프 정부 하반기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국 조야의 외교안보관련 인사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되었다.

• 이러한 초당적 중국 인식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1972년 키신저와 닉슨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배경에는 당시 소련에 대한 억제 효과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거대 경제잠재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시장에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질서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게다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중국도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종국에는 정치 체제에서도 법치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중국 '경제의 자유화'(liberalization)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해서도 중국 '거버넌스의 자유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관여를 통한 중국의 변화'라는 전략은 폼페이오 전임 국무장관의 말대로 '중국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을 낳았다. 중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더욱 권위주의화 되었고 대외적으로도 점차 미국이 주도해 온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의 한 행위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대안의 국제질서를 상상하고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트럼프 정부는 초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가치보다는 거래주의의 시각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이 중국의 책임이라고 공격한 이후 트럼프 정부는 2020.5.21. '대중국전략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무역전쟁이라는 기존의 거래주의를 넘어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 대한 압박과 대결이라는 신냉전의 대결 정책을 제시한다.[6] 그러나 이렇게 중국과의 대결을 단순히 국가이익을 둘러싼 대결이 아니라 이념대결, 체제대결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에는 변화가 없었다.

6)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1. 2020).

- 바이든의 대외정책은 처음부터 중국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와 달리 일방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와 협력을 통해 중국과 체제대결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것이 체제대결인 것은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대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 간의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 대결이기 때문이다.

- 바이든의 이러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체제대결 구도의 시각은 중국이라는 외부적 위협 요인에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에까지 불어 닥친 포퓰리즘의 파고는 이미 그에 앞서 유럽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전후 경제적 번영과 자유 확산의 토대라 여겨졌던 민주주의는 서구에서조차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그에 대한 신뢰를 복구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 사실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슬로건은 일차적으로 미국 국내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에 그 연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정 제도에 구현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후보 시기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미국 국내 민주주의의 퇴조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민주주의는 미국 사회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미국의 힘이 솟아나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미국 국내의 민주주의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7]

-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초래한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대상 집단은 미국 중산층이다. 미국 중산층이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화될 때 미국의 국내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안정화하는 것이고 선거 전략적으로는 트럼프의 포퓰리즘 지지 기반을 축소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도 미국 중산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8]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체 전략은 미국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의 결합, 연계'라 할 수 있다.

---

7)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p. 65, 손병권, "Special Report.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세계질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2020년 8월). pp. 6. 참조.

8)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pp. 68,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p. 15.

2. 민주주의 가치외교 동향

가.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와 민주주의 가치외교

- 미국은 4.12. 쿼드 4개국 정상회의, 4.16. 미일 정상회담, 5.21. 한미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증진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확인한다. 민주주의 가치로는 자유, 인권, 법치, 국제법, 다자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공동 가치의 재확인은 다소 의례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미국과 연결하는 연대의 끈이 '민주주의 가치'에 있다는 점, 즉 이들 국가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적 거버넌스가 정착된 국가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 이 점은 미국이 일본군 위안부와 일제 징용 노동자,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한일 양국을 화해, 중재하려는 노력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화해, 협력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일방주의를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화해와 중재를 방기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화해, 협력에 외교력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는 전략은 미국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4.2.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뒤 성명이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9)]

-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가 결국 대중 공동 전선의 형성을 지향하는 한, 아시아 지역 정상회의에서 그것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 회의 결과는 미일 정상회의였다. 미일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쿼드 4개국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인권상황이나 중국 정부의 반(反)민주주의적 행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10)] 다만 한미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양측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9)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National Security Advisors. Press Statement", (April 2. 2021).
10) The White House, "U.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U.S. 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 (April 16. 2021). The White House,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March 12. 2021). The White House,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1).

• '민주주의 가치외교'가 외교전략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협력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례는 한미 정상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의 설명 자료에서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함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민주주의·거버넌스 협의체'(U.S.-ROK Democracy and Governance Consultations, DGC)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양측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적 회복력, 모범적 거버넌스, 민주적 제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11]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활동 윤곽이 제시되겠지만, 한국은 향후 이 협의체를 통해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저개발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G7 정상회의와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이니셔티브 추진

•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가운데 6.11.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을 처음으로 거명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G7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공동의 글로벌 도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신장과 관련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그리고 "영국-중국 공동선언과 홍콩 기본법에 포함된 홍콩의 권리, 자유,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12]

• 그리고 공동성명 이외에 '열린 사회'에 대한 별도의 부속 성명에서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을 결합시키는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 즉 인권, 민주주의 제도, 사회적 포용,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 기반의 무역,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 등을 열거하고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속 성명에는 G7 외에 한국을 포함하여 초청국 4개국도 참여하고 있다.[13]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G7은 단순히

11)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2021년 5월 22일).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347, 검색일: 2021년 6월 18일).
12) "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É. 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June 13. 2021), 제49항. 미국은 더욱 강경한 표현을 원했으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제안으로 표현이 다소 부드럽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 "2021 Open Society Statement". (June 13. 2021).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경제 협의체'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수호, 증진하는 '민주주의 협의체'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021 G7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이니셔티브라 할 수 있다. 제목에서부터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여 G7 정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선언에 포함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바이든은 후보 시기부터 미국 경제의 장기부양책으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명칭의 국내정책 공약을 제시해왔다. 취임 후 이 공약은 '미국 구조 계획', '미국 일자리 계획', '미국 가족 계획'으로 구성된, 총 6조 달러에 달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국내의 재건 계획을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갖는 대외정책으로 확장한 것이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그램이다.

- 그것의 단초는 이러한 민주주의 쇄신 전략을 입안한 설리반과 캠벨이 공동으로 2019년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그들은 민주주의 진영의 저개발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반(反)중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친(親)성장'(pro-growth), '친(親)지속가능성'(pro-sustainability), '친(親)자유'(pro-freedom)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최선의 길은 "좋은 거버넌스, 특히 투명성과 책임성에 필수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 독립적인 언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퇴보할 위험을 줄이고 개도국의 삶을 개선하면 결국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동맹국과 파트너국가의 다자간 자금 투입과 인적 자본과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투자가 고비용, 환경 퇴화적, 부패 친화적인 중국식 '추출적'(extractive)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한다.[14]

- 이번 공동성명의 67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파트너십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그대로 녹아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 B3W 프로젝트의 강조점은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이라는 가치에 따르는 인프라 투자라는 것, 환경, 기후, 노동, 사회보호, 반부패 등에서 높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에 있다.[15] 이는 공동성명에 분명히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14) Kurt M. Campbell/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rophe",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p. 108.
15) "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É. 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제67항.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G7 Leaders Launch Build Back Better World (B3W) Partnership", (June 13. 2021).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받는 비판 사항, 즉 수여국의 채무국화, 환경 비친화성, 불투명성, 부패 등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B3W를 위한 약 40조 달러에 달하는 기금의 재원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곧 워킹그룹이 가동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여 미국, EU,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국제 개발프로그램인 'Blue Dot Network'에 준하여 표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EU의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EU-Asia Connectivity Strategy도 B3W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16]

다. 미·EU 정상회의와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설립: 가치동맹과 기술동맹의 결합

- G7 정상회의에 바로 이어 6.15. 개최된 미·EU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해 보다 선명하게 복합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협력, 경쟁, 체제적 라이벌'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틀에서 협의,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3차원의 복합적인 중국 규정은 본래 EU의 대중전략으로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성명도 이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공동성명은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신장, 티베트에서의 인권침해, 홍콩의 자치와 민주적 절차의 침식, 경제적 강압, 허위정보 캠페인 등을 포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17]

- 이번 미·EU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가치외교' 측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의 공동 설립이다. 이는 EU가 2020년 12월 미국 측에 먼저 제안하고 미국이 수용한 결과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도 민주주의 가치와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연계시키려는 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9년 블링컨은 기술-권위주의적 거버넌스 모델에 대항하여 서구와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민주주의 동맹' (a league of democracies) 혹은 '민주주의 협력 네트워크'(a democratic network)를 제안한 바 있다.[18]

16) "G7 wollen die neuen Seidenstraße übertrump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Juni 14. 2021.
17) The White House, "U.S.-EU Summit Statement: Towards a Renewed Transatlantic Partnership", (June 15. 2021).
18) Antony J. Blinken/Robert Kagan, "'America First' is only making the world worse. Here's a better approach",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9. 2019.

- EU는 이번 제안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중국을 겨냥한 포괄적 내러티브를 단순히 추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과 EU는 이 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생산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도 다룰 수 있는 대화를 위한 제도화된 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갖는다.[19]

- TTC는 무엇보다 중국이 미래 첨단기술을 주도하여 기술 패권을 차지할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과 EU가 국제 기술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 산업기술의 협력을 위한 기구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기술 패권의 주도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의 첨단 산업기술이 어떤 가치에 기반해야 하느냐'는 가치와 규범의 문제가 내재되어있다.

- 미·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인권 존중을 포함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배포에 협력하고 호환되는 표준 및 규정을 장려할 계획이다."[20]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 개발되고 이 체제의 수호를 위해 개발되는 미래기술에 대해 민주주의 규범에 입각한 미래기술 개발을 위해 대안적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후 및 녹색기술, ICT 보안 및 경쟁력,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플랫폼,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기술 오용, 수출 통제, 투자 심사,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사용 촉진, 글로벌 무역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워킹그룹을 발족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인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재조정 강화하기 위한 워킹그룹도 둘 예정이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래 첨단기술의 거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표준을 위한 플랫폼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21]

---

19) Rosa Balfour, "The EU-U.S. Summit Is a Test for New Transatlantic Cooperation, Carnegie Europe", (June 15, 2021). (https://carnegieeurope.eu/strategiceurope/84769?utm_source=rssemail&utm_medium=email&mkt_tok=MDk1LVBQVi04MTMAAAF9rmrrfX1PEHeWBbIT0RQBjpP6iPS9wIxBqDxD7WnrZ2-PjT4_4UmRxEeqT_dbibGuI9Ylx18he-fqpGi0JHwHBsmQ0RISgo_IUiK-E0leJvn-Llg, accessed: June 17. 2021).

20) "US-EU Summit Statement: Towards a Renewed Transatlantic Partnership", 16항.

21)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규제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서 미국과 EU가 수렴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Alexandra Brzozowski/Luca Bertuzzi, "Transatlantic tech talks team-up on China, but avoid confronting key issues", *EURACTIV*, (June 17. 2021). (https://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transatlantic-tech-talks-team-up-on-china-but-avoid-confronting-key-issues/?utm_source=piano&utm_medium=email&utm_campaign=10455&pnespid=m7Vj9uFTWRCNiIQn3X6D6JJ.RuIE3fBtTBx6gTqUTw, accessed: June 25. 2021).

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추진과 전망

1)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추진 계획과 논란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 및 G7과 같은 다자적 플랫폼 이외에 '민주주의 가치외교'를 주 활동 영역으로 삼는 독자적인 다자적 플랫폼을 구축하려 시도하고 있는바, 그것이 본래 올 연말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제안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이다. 세계 무역의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있듯이 세계 민주주의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자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바이든과 그의 전략그룹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우위를 확보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전략에 몰두해왔다. 바이든은 이미 2018년 'Penn Biden Center' 연구소를 설립하여 미국 민주주의 퇴조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2]

- 2020년 민주당 후보 경선 중이던 바이든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신이 당선된다면 자유진영 국가들의 정신과 공유된 가치를 쇄신하기 위해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한다. 여기서 논의될 영역으로 반부패 투쟁,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대내외 인권 신장의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다.[23] 그는 취임 후 여러 기회에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에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해낼 것이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거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올 연말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미·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25항에 EU와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24]

- 그러나 정상회의 개최 공언 이후 구체적인 개최 형식, 초청 범위 등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 미국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의 국내 민주주의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는 정책은 호소력을 갖기 어려우며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25]

---

22) 허석재, "미국 민주주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참조.
23)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p. 67.
24) "U.S.-EU Summit Statement: Towards a Renewed Transatlantic Partnership", 25항.
25) James Goldgeier/Bruce W. Jemtson, "The United States Needs A Democracy Summit at Home", *Foreign Affairs*, (January 9. 2021).

• 또한 초청대상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문제도 정상회의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정상회의에는 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국제적인 시민사회 조직도 초청될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다. 그러나 초청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y)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emerging democracy) 이외에 '퇴보된 민주주의 국가'(backsliding democracy)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집권자가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적인 퇴행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인도, 터키, 헝가리 등과 같은 국가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이자 쿼드의 일원인 인도, NATO 회원국인 터키를 배제하기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초청했을 경우 민주주의의 쇄신과 신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제에 대한 논의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가치와 지정학적 고려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은 사전에 적절한 민주적, 법적, 돈세탁 기준을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이 회의의 품질과 효과를 보장하자는 제안도 제시되고 있다.[26]

2) 추진 전망

•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G7 공동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미·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개최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의체인 G7과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제도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 2021년 G7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영국이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하여 11개 국가가 참여한 형식이 되었다. 현재 G7은 이미 경제·무역·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진 산업국의 협의체'에서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의 협의체'로 변신하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존슨 영국 총리는 향후 G7+4개 초청국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의 국제 협의체인 D11로 G7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대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 Anders Aslund, "A 'summit of democracy' is a great opportunity", *The Hill*, (May 28. 2021).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55886-a-summit-of-democracy-is-a-great-opportunity, accessed: June 17. 2021).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Michael Crowley, "As Biden Plans Global Democracy Summit, Skeptics Say: Heal Thyself First", The New York Times, January 31. 2021, 참조.

- 다른 한편 모든 이슈를 다루는 거대 연합체를 만들기보다는 무역, 기술, 공급망, 표준 등과 같은 긴급한 현안에 따라 회합하는 '맞춤형 기구' 혹은 '임시기구'로서 D10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제출되고 있다.[27] 또 다른 제안으로는 일차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전략적인 유사입장의 측면이나 글로벌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를 G7에 포함시키고, 추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중 전략적 유사입장에 대한 우려가 극복되면 추가로 포함시켜 D10을 구성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D10이 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정상회의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회의 결과의 형태를 만드는 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올 연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언급하고는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된 문제들의 제기와 함께 아직 구체적 정책의 윤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성급히 올해 개최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개최로 연기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본래 계획인 올해 하반기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9]

27) Kurt M. Campbell/Rush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Balance and Legitimacy", *Foreign Affairs*, (January 21. 2021).
28) Ash Jane/Matthew Kroenig, "From the G7 to a D-10: Strengthening Democratic Coopertation for Today's Challenges", p. 3, 21 참조.
29)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對)중러 압박과 글로벌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두 전략을 수사적으로 분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Ivan Krastev, "Biden Can't Decide What Counts as a 'Democracy'", *The New York Times*, May 12. 2021, 참조.

Ⅲ. 이해 당사국의 대응과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전망

1. 이해 당사국의 대응과 입장

가. 중국의 체제경쟁 담론과 대응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의 체제경쟁은 그것의 '전략적 대결'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양제츠 외교담장 정치국원은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국제여론을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나 국제질서를 대다수 국가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30]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시간이 갈수록 보다 분명한 윤곽을 그리고 있다. 4.5. 일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무장관은 "특정 초강대국의 의지가 국제사회를 대표할 수 없으며 이 초강대국을 따르는 소수 국가들이 다자 규칙을 독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31] 이러한 대응은 이후 G7, 미·EU 정상회담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리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도 서구의 규범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양제츠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은 미국 고유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중국 고유 스타일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다.[32] 미중 고위급 회담 직후 열린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중 회담의 공동선언문은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을 주장한다. 서구 국가들이 국내문제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어떤 단일한 민주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다 공정하고, 보다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다극적 세계질서'의 '국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한다.[33]

30) 『연합뉴스』, 2021년 3월 21일.
31) Wang Y, "Japan Should View China's Development with More Positive Mentality",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wshd_665389/t1867096.shtml).
32) "Yang Jiechi Puts Forth China's Stands at the Start of China-U.S. High-level Strategic Dialogue",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wshd_665389/t1862643.shtml).
33)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Joint Statement by the Foreign Ministers of China and Russia on Certain Aspects of Global Governance in Modern Conditions", (March 23. 2021).

-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G7, 아시아에서 쿼드,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 유럽에서 영국과의 특수한 관계의 동맹, NATO, EU와의 동맹 등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가치외교의 전략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중국식 민주주의'가 중국의 경제, 생태, 사회, 문화적 개선에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각국이 고유한 발전경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데올로기적 대결이나 중국의 사회 시스템을 수출하려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34]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면에서 중국산 의료보건 제품, 백신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류 공동운명체'라는 대안 담론을 확산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대안적 국제질서의 모습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 대신 중국은 가치 중심보다는 공동 이익 추구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국제협력기구와 협의체를 통해 대항 전선을 형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보아오 포럼', '아세안 정상회의', '란창강·메콩강 협력 프로젝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과 같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G7, 미 EU 정상회의, NATO 정상회의 등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대응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구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 그러나 미국의 G7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제 협의체는 신흥 경제국의 협의체인 '브릭스'(BRICS)라 할 수 있다.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가 참여하여 이 그룹이 출발할 시기에만 해도 가까운 시기에 경제 규모 면에서 G7을 능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두 참여국인 중국과 인도가 깊은 분쟁에 빠지면서 '브릭스'는 활력을 잃고 있다. 2121년 인도가 의장국이 되어 개최할 예정인 13차 회의는 연기된 상태이다. 그리고 참여국 중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하고 브라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 볼소나루조차 협력 심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향후 중국과 인도 간 분쟁이 일정 조정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한 브릭스의 협력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다.[35]

34) "Commentary: Chinese Democracy Delivers Real Results to the People", *Xinhua*, April 7. 2021.
35) Heribert Dieter, "First Summit of the Anti-China Coalition", SWP Comment No. 36, (June 2021).

나. EU 및 유럽 국가의 입장

• EU는 2003년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2016년까지도 중국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였다.[36] 그러나 2019년부터 중국은 복합적으로 규정된다. 중국은 상호 일치하는 목표를 갖는 점에서는 '협력적 파트너'(cooperation partner), 이익의 상호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상 파트너'(negotiating partner), 기술적 주도권 추구를 둘러싸고는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 대안적 거버넌스의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체제적 라이벌'(systematic rival)로 규정된다. 이로써 EU의 전략문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은 '체제적 라이벌'로 등장한다.[37]

• 이후 중국은 EU에게도 점차 '전략적 동반자'보다는 '체제적 라이벌'로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전략과 정책이 추진된다.[38] 중국 체제변화 가능성의 부재와 권위주의의 강화, 유럽의 전략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투자, 취약한 유럽 국가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투자, 중국의 소수민족과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미중 갈등의 격화와 선택의 압박 등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EU가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등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지난 12월에 체결된 중국과의 투자협정이 무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최근 중국의 인권침해와 반민주주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EU의 이러한 대중 태도 변화가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EU가 중국을 점차 '체제적 라이벌'로 상대한다고 해서 다른 측면들, 즉 '협력 파트너', '협상 파트너', '경제적 경쟁자'의 측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U는 대중 관계가 갖는 복합성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대중 관계를 '민주주의 거버넌스 대 권위주의 거버넌스'의 가치대결, 체제대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항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번 미·EU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문안에서 이러한 EU의 입장이 반영되어 미국이 원했던 보다 강경한 대중 표현이 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36)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lements for a New EU Strategy on China", JOIN(2016), (June 22. 2016).
37)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U-China A Strategic Outlook", JOIN(2019), (March 12. 2019).
38) EU의 이러한 대중 인식의 변화와 배경에 대해서는 전혜원, "유럽이 본 중국: 전략적 동반자에서 체제적 라이벌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28,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2020), 참조.

- 이러한 EU의 접근은 영국이 탈퇴한 이후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중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이 '체제적 라이벌'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전략 전환에 동조하면서 미국과 함께 인권, 자유권, 민주주의에 방점을 둔 대중 공동 외교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하에서 시작된 EU와 미국 간 '중국에 관한 대화'(dialogue on China)를 재개하기로 합의, 가동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한편으로 가치와 인권의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현실정치와 경제의 측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일이다. 유럽은 중국과 공통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이와 병행하여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있어서는 비판과 체제경쟁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유럽의 길이라는 입장이다.

- 이러한 전략적 태도는 최근 G7 정상회의나 미·EU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반응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 메르켈 총리 공히 두 정상회의의 결과가 대중 체제대결의 공동 전선 구축으로만 간주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령 메르켈은 G7의 중요한 결과물인 B3W가 서구 국가들의 기존 개발지원정책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지 중국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 혹은 어떤 무엇을 반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39] '어느 것이 보다 나은 거버넌스인가'라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품고 있던 것이다. 다만 유럽은 이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익 추구 외교와 가치외교의 병행노선을 견지하고 가치외교가 격화된 체제대결이 아니라 체제경쟁으로 전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좋은 거버넌스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산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외교' 공세를 강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관건은 미국의 국내 정치적 조건이 이러한 외교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 있다. 미국민이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가치외교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

39) Jochen Buchsteiner, "Durchwachsene Harmonie", *Frankfurter Allgemeie Zeitung*, Juni 14. 2021.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의 극복과 경제재건의 성과와 속도, 2022년의 중간선거 결과 등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는 언제든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40]

- 둘째 중국의 강력한 부상으로 미국의 외교적 실행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외교' 추진에서 동맹국의 협력은 필수적 조건이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가능한 한 동맹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이들을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깃발 아래 연합할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 관계의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EU에 대해서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갈등을 둘러싸고 부과된 관세를 유예하고, 독일에 대해서는 새로운 러시아 가스관(nord stream 2)에 대한 제재를 유예한 것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동조한 결과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협력의 동력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B3W가 실제 실행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동맹국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부담이 과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동맹국들의 참여 동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으로 이 프로젝트가 일정한 효과를 볼 경우 여기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개선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 '민주주의 가치외교'는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경제적 제재는 물론 수출입 통제, 중국 국내시장에 대한 유무형의 통제, 정치, 군사적 압박 등으로 강화될 때 각각의 동맹국과 파트너국가가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내구력을 넘어설 경우이다. 이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지원을 예상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상호 조율에 따른 공동 대응일 것이다. 중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제재라 할지라도 유사입장국 다수가 공동 대응하는 경우 중국의 강경 대응은 순화되거나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0) 강선주,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질서의 지속가능성: 국내정치 필요조건과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에 함의", pp. 30 참조.

• 셋째 중국이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참여하는 동맹국과 파트너국가 사이에 간극을 벌이는 전략이 성과를 보인가가 또한 관건이다. 중국은 미국과 EU 및 유럽 국가 사이에 기왕에 존재하는 입장의 차이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중국은 체제경쟁을 상호 공격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EU와 유사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현안으로는 비준 중단 상태에 놓여있는 유럽과의 투자협정을 되살리기 위해 유럽에 대해 큰 양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통해 투자협정을 소생시킨다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외교'의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EU와 미국 간 '중국에 관한 대화'(dialogue on China) 채널의 적절한 활동 여부에 따라 분쟁 사항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Ⅳ. 한국 외교전략에 주는 시사점

1.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체제경쟁에서 한국의 스탠스 확립

•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대한 동승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략적 모호성'과 같은 개념은 버리고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진보적 입장에서는 한국이 "지정학, 지경학, 가치 면에서도 특정 국가를 견제하거나 배제하는 연합 노력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겨냥한 민주주의 정상회담이나 D10(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에 참여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41]

41)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서울: 청림출판, 2021), p. 297.

- 물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 구도 속에 들어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D10이나 '민주주의 정상회담'이 중국 견제의 성격만 갖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최대 동맹인 EU와 유럽 국가들은 이를 중국을 표적으로 삼는 체제대결의 신냉전 구도보다는 '무엇이 더 나은 체제인가'라는 체제경쟁의 구도로 보고 참여하고 있다. 바이든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미국 내의 민주당 좌파에서도 '민주주의 가치외교'가 대결 구도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령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후변화, 코로나19, 핵무기의 위협 등 실존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미중관계를 제로섬의 경제 군사 대결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2]

-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외교적 스탠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가치외교'에 동참하되 그 안에서 이 외교전략이 중국 배제의 체제대결로 격화되지 않고 체제경쟁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EU 및 유럽 국가와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대중 관계가 가치문제로만 환원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43] 유럽과 공유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인권탄압과 반(反)민주주의적 행위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열린사회' 성명에는 참여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며 대중 공동 전선 형성의 의도를 지닌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의 성명에는 참여한 것이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체제대결 구도'보다는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긍정적 효과의 확산'을 지향하는 외교전략을 향후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외교 전략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조응하는 외교전략의 마련

-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단순히 한국방위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지역 문제까지 포함하는 글로벌한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동성명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42) Bernie Sanders, "Washington's Dangerous New Consensus on China. Don't Start Another Cold War", *Foreign Affairs*, (June 17. 2021).
43) 김기정외, 『미중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p. 120 참조.

글로벌 보건 문제, 첨단기술 개발, 라틴아메리카 개발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한미관계가 점차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44]

- 한미동맹이 지역적이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성격을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외교전략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한 차원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2009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양국의 동맹이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양자 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차원의 글로벌화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발전, 첨단기술 개발과 표준화, 보건의료 협력, 개발지원 등에서 우리 외교전략의 글로벌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할 수 있다.

3.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원

-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은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교 자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첨단기술 개발의 인프라와 성공적 민주주의 발전의 경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외교'와 관련하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DGC)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은 중저소득,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해 이들 국가도 민주주의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실제 사례로서 하나의 모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향후 '민주주의 정상회의', 'D10' 혹은 'D11' 등의 다자적 민주주의 협의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주요 국가의 모범은 저개발, 비민주주의 국가에게 그들의 현실과 너무 유리된 다른 세계로 여겨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모범은 이들 국가도 추진해볼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모범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은 이들에게 소중한 전략적 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4) "미 대북정책, 해결이 목표 … '아시아 차르' 한국언론 첫 인터뷰", 『연합뉴스』, 2021년 5월 1일.

참고문헌

강선주,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질서의 지속가능성: 국내정치 필요조건과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에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20-18,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김기정 외, 『미중경쟁과 한국의 외교 유연성』,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

김태환,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강대국 사례와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문화와 정치』 제6권 1호 (2019).

문정인, 『문정인의 미래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서울: 청림출판, 2021).

손병권, "Special Report.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세계질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EAI), 2020년 8월).

전혜원, "유럽이 본 중국: 전략적 동반자에서 체제적 라이벌로",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28,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2020).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2021년 5월 22일).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347, 검색일: 2021년 6월 18일).

허석재, "미국 민주주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이슈와 논점 제1795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 1월 25일).

Anders Aslund, "A 'summit of democracy' is a great opportunity", *The Hill*, (May 28. 2021).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55886-a-summit-of-democracy-is-a-great-opportunity, accessed: June 17. 2021).

Rosa Balfour, "The EU-U.S. Summit Is a Test for New Transatlantic Cooperation, Carnegie Europe", (June 15, 2021).(https://carnegieeurope.eu/strategiceurope/84769?utm_source=rssemail&utm_medium=email&mkt_tok=MDk1LVBQVi04MTMAAAF9rmrrfX1PEHeWBbIT0RQBjpP6iPS9wIxBqDxD7WnrZ2-PjT4_4UmRxEeqT_dbibGuI9Ylx18hefqpGi0JHwHBsmQ0RISgo_IUiK-E0leJvn-Llg, accessed: June 17. 2021).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Antony J. Blinken/Robert Kagan, "'America First' is only making the world worse. Here's a better approach", *The Washington Post*, January 29. 2019.

Alexandra Brzozowski/Luca Bertuzzi, "Transatlantic tech talks team-up on China, but avoid confronting key issues", *EURACTIV*, (June 17. 2021). (https://www.euractiv.com/section/digital/news/transatlantic-tech-talks-team-up-on-china-but-avoid-confronting-key-issues/?utm_source=piano&utm_medium=email&utm_campaign=10455&pnespid=m7Vj9uFTWRCNiIQn3X6D6JJ.RuIE3fBtTBx6gTqUTw, accessed: June 25. 2021).

Jochen Buchsteiner, "Durchwachsene Harmonie", *Frankfurter Allgemeie Zeitung*, Juni 14. 2021.

Kurt M. Campbell/Rush Doshi,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Balance and Legitimacy", *Foreign Affairs*, (January 21. 2021).

Kurt M. Campbell/Jake Sullivan, "Competition Without Catasrophe",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9).

"CARBIS BAY G7 SUMMIT COMMUNIQUÉ. Our Shared Agenda for Global Action to Build Back Better", (June 13. 2021)."

"Commentary: Chinese Democracy Delivers Real Results to the People", *Xinhua*, April 7. 2021.

Michael Crowley, "As Biden Plans Global Democracy Summit, Skeptics Say: Heal Thyself First", *The New York Times*, January 31. 2021.

Heribert Dieter, "First Summit of the Anti-China Coalition", SWP Comment No. 36, (June 2021).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lements for a New EU Strategy on China", JOIN(2016), (June 22. 2016).

European Commission,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U-China A Strategic Outlook", JOIN(2019), (March 12. 2019).

James Goldgeier/Bruce W. Jemtson, "The United States Needs A Democracy Summit at Home", *Foreign Affairs*, (January 9. 2021).

"G7 wollen die neuen Seidenstraße übertrump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Juni 14. 2021.

G. John Ikenberry, "The Next Liberal Order. The Age of Contagion Demands More Internationalism, Not Less", *Foreign Affairs*, Vol. 99(4), (July/August 2020).

Ash Jane/Matthew Kroenig, "From the G7 to a D-10: Strengthening Democratic Coopertation for Today's Challenges", Atlantic Council, (2021).

Ivan Krastev, "Biden Can't Decide What Counts as a 'Democracy'", *The New York Times*, (May 12. 2021).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Final Report*, (2021).

Bernie Sanders, "Washington's Dangerous New Consensus on China. Don't Start Another Cold War", *Foreign Affairs*, (June 17. 2021).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Joint Statement by the Foreign Ministers of China and Russia on Certain Aspects of Global Governance in Modern Conditions", (March 23. 2021).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G7 Leaders Launch Build Back Better World (B3W) Partnership", (June 13. 2021)

The White Hous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The White House,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March 12. 2021).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National Security Advisors. Press Statement", (April 2. 2021).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1. 2020).

The White House, "U.S.-EU Summit Statement: Towards a Renewed Transatlantic Partnership", (June 15. 2021).

The White House, "U.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U.S.-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 (April 16. 2021).

The White House,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1).

Wang Y, "Japan Should View China's Development with More Positive Mentality",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wshd_665389/t1867096.shtml, accessed: June 25. 2021).

"Yang Jiechi Puts Forth China's Stands at the Start of China-U.S. High-level Strategic Dialogue",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wshd_665389/t1862643.shtml, accessed: June 25. 2021).

"2021 Open Society Statement", (June 13. 2021).

Abstract

Enforcements and Implications of 'Democratic Values Oriented Diplomac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n, Seung Wan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aking the 'protection and revival of democracy' as the basis of its policy in the face of the decline and crisis of democracy at home and abroad. Currently,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oundation of democracy by restoring a stable middle class through large-scale investment domestically, and forming a common front against authoritarianism such as China through solidarity between democratic countries externally. This article analyzes the trend of 'democratic values oriented diplomacy' promot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with its allies in Asia and Europe and presents its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 It looks into 'democratic values oriented diplomacy with Asian allies, the 'Build Back Better World' (B3W) initiative announced at the G7 Summit, the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agreed with the EU, and the 'Summit for Democracy' plan. It then analyzes the positions of China, the EU and European countries, and predicts the direction of 'democratic values oriented diplomacy'. This article sees that Europe's positions on the Biden administration's 'democratic values oriented diplomacy' have

Abstract

points of convergence with our interests. That is, it should become a ‘systemic competition’ for better governance, not a ‘new Cold War’ or a systemic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And in this context, we find an asset to globalize ROK's diplomatic strategies from the ‘experience of successful democracy’ and propose democracy support for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Keywords: ‘democratic values oriented dipolomacy’, ‘summit for democracy’, democracy, authoritarianism, system competition

INSS 전략보고

July 2021. No.126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 빌딩
02-6191-1000 02-6191-1111 www.inss.re.kr